

##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외교장관 연설문

2014.3.5.(수)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유엔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려는 유엔의 숭고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정부는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지구촌 행복’을 천명하고 한반도와 아시아를 넘어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이것은 지난 세기 식민침탈과 전쟁, 빈곤과 억압을 겪었으며,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로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유엔이 평화와 안보, 개발, 인권을 3대 핵심축으로 하여, 유엔 체제 전반의 “인권주류화(mainstreaming)”를 추진해 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2012년 발표한 5개년 행동계획(action agenda)과 작년 말 도입한 “인권우선(Rights Up Front)” 이니셔티브가 유엔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인권이사회가 차별과 폭력의 철폐를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지난 6년 동안,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협약기구를 강화하기 위한 Pillay 인권최고대표의 헌신적인 노력에 사의를 표명합니다.

의장,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북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걸쳐 생명과 자유에 대한 위협, 차별과 폭력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으며, 무력분쟁하에서의 성폭력은 지난 세기에 이어 금세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불처벌 관행 척결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유엔과 인권이사회의 지속적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시리아 상황의 경우, 2011년 이후 네 번의 특별회기에 이어 지난 한해에도 인권이사회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았으나 별다른 진전없이 악화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리아 및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및 인도적 상황 악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정치적 해결에 합의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지난 20여년간 국제사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지난 해에는 바로 이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COI는 지난 수개월간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수록한 방대하고,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Kirby 위원장을 비롯한 COI의 노력에 사의를 표합니다.

COI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COI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에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COI의 활동성과를 이어나갈 UN 메커니즘 강화를 적극 지지합니다. 특히, COI 설립의 견인차 역할을 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앞으로 COI 후속 조치 이행의 중심적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유를 찾고자 북한을 떠난 많은 탈북민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강제 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할 것을 강조합니다.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분단상황이 지속됨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도 그 절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COI 보고서가 한반도가 안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비극, 즉, 이산가족,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문제도 다루고 있는 점을 평가하며, 최근 재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더 늦기 전에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북한측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합니다.

의장,

1990년대 르완다와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참혹하게 벌어진 분쟁하 성폭력의 충격 이후, 국제사회는 지난 20년간 무력 분쟁하 성폭력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사회는 무력분쟁하 성폭력이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무력분쟁하 성폭력은 여전히 지구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모든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UN이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고 불처벌(impunity) 관행 척결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는 Swire 영국측 수석대표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국 정부 주도로 “분쟁하 성폭력 방지 이니셔티브(PSVI)” 가 지난해 출범하고 금년 6월에는 런던에서 성폭력 종식을 위한 국제회의

(global summit)가 개최되는 점을 핵심참여국(champion)의 하나로서 평가하며 한국 정부도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21세기 현재에도 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들과 일본간 양자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지난 20년전 이래 지금까지 Coomaraswamy 여성폭력 특별보고관, McDougall 유엔인권소위 특별보고관,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에 이어, 작년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고문방지 위원회 등 다수의 유엔 인권 메커니즘들이 일관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유엔 인권 메커니즘은 대부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차원의 책임있는 조치, 올바른 역사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EU 등 의회에서 다수의 결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20여년전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전 세계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공개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을 촉발하였고,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살아 있는 현재의 인권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인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네덜란드 출신 호주인 오헤른 할머니가 2007년 미하원 청문회에서 한 용기있는 증언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녀는 “50여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고 2차대전 중에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인 '잊혀진 홀로코스트(forgotten holocaust)'를 폭로한다” 고 밝히고, “일본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생생한 증언을 무시하고, 20여년 전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정부 대변인의 담화마저 부인하려고 그 작성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틀 전에는 일본 정부 내에서 후세의 교육을 담당하는 고위인사가 위안부 문제가 날조되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한평생을 당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전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것으로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입니다. 또한, 이는 지난 20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21세기인 지금도 무력분쟁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 분개한다” 고 하면서, “여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주장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는 2차례의 세계대전과 함께 여러 전쟁 및 내전을 거치면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목격하였습니다.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출발은, 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 과거의 잘못과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장,

유엔 창설자들은 전쟁의 참화로부터 후세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유엔 헌장에 담으면서, 동시에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믿음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지난 70년간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단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해 갈 길은

**매우 험난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유엔의 인권 주류화 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인권이사회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인권이사회의 노력에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